



지금 세계는 디지털사회의 빠른 이행, 냉전종식 후 국제사회의 역학관계의 구조적 변혁, 여행의 자유화, 사고방식의 파격적 개방 및 유연화 등으로 인하여 아주 눈부시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200여 년 전의 산업혁명이나 최근의 주요한 기술적 발명보다 더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봅니다. 경직된 냉전체제의 붕괴로 말미암아 자유롭고 유연하고 창의적 분위기 속에서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패러다임들이 수년간 많은 국제적 토론을 거쳐 인류생활의 새로운 규범 또는 보편적 가치로 계속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형성된 보편적 가치들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눈앞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직접 좌우하거나 당장 가시적 성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으나 인류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장기적, 근본적 원칙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입니다.

인권(Human Rights)은 우리에게 낯익은 단어인데 주로 독재시대의 탄압에 저항하던 많은 민주투사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제 겨우 저항권적 인권에서 생활밀착형인 복지권적 인권개념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제적 발전 동향은 복지권적 인권의 단계도 넘어서 이보다 좀더 잘살고 인간대접을 하자는 제3세대의 인권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권은 공리공론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지요.

2014년 3월 핵안보 정상회의가 헤이그에서 열렸을 때 이 행사를 준비하는 화란 외무부는 참석한 국가원수에게 줄 간단한 선물로서 제3세계에서 만든 값싸고 질 좋은 물건을 물색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행여나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면서 제조된 물건인지를 가려내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최근에 그들은 저명한 명품회사가 제품을 중국의 죄수들을 동원하여 만든 것임을 밝혀내어 항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 골라 마신다는 공정무역커피(fair trade coffee)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는 원산지에서 커피농사를 지어 상품판매대에 오를 때까지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등 착취없이 생산된 커피를 말



송상현  
본연맹 이사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회장

## 인권의 생활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커피농장 근로자의 인권을 생각하여 공정무역커피만을 마시는 경우는 못보았습니다.

2022년 월드컵을 개최하는 카타르는 개최지 선정과 관련하여 뇌물수수 외에도 축구경기장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네팔 근로자의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엄청난 국제적 비난을 받아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식품(GMO)을 먹이는

것이 인권침해가 아닌가 하는 논의도 활발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GMO 수입국가입니다.

이런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인권은 그 개념과 가치가 모든 면에서 우리 생활의 각 방면에 깊숙이 침투해 있어서 정부나 기업은 물론 개인들까지도 이를 준수하면서 살아야 할 일상생활 속의 행동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인권존중을 사내 규범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고, 국방부도 뒤늦게 윤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부대내 인권규범을 제정하여 실시한다고 하나 수뇌부의 인권의식과 정책의지에 비추어 얼마나 언행이 일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각 대륙마다 오래 전부터 인권법원이 창설되어 가동되고 있습니다. 제가 2004년 방콕의 아시아 태평양지역 NGO총회에서 이를 강하게 제의했지만 이 지역에서만은 인권법원을 창설한다는 움직임은 아직도 없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오로지 외형적 경제성장에 관한 과장된 선전용어만 난무할 뿐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는 체계적 움직임은 드문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이후로 세계는 70년 동안, 특히 냉전종식이후로는 인권 개념의 외포와 내연이 크게 확대되면서 정부나 기업이 인권 측면의 함의를 무시한 채 정책을 수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권처럼 팔방미인적으로 요긴한 주제가 없건만 정부나 국민들은 인권이 국가의 모든 정책의 근저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14년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를 공식 방문시 양국 대통령에게 왜 국가외교정책의 제1순위가 인권인가를 물었더니 이구동성으로 불과 20여년전 소련의 압제에서 벗어난 쓰라린 과거 경험을 통하여 인권보다 더 포괄적이고 중요한 근본가치가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2014년 9월 유엔총회에 참석한 117개국의 정부수반들이 2015년 이후의 개발 의안(SDG)과 그 이행문제를 토론하면서 다시한번 인권과 법의 지배(the rule of law)의 강화를 강조하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도 북한 인권법이 통과된 마당에 북한과 비교하여 도덕적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서라도 더욱 인권을 모든 대내외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이를 확산함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2대 국제형사재판소장)